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2024

통권 24-3호

예산, 정책 이슈

Budget-Policy Issue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2024

통권 24-3호

예산·정책 이슈

Budget-Policy Issue

이번달 주제 : 추가경정예산 제도

- 1 추가경정예산 제도
- 2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3 추경예산의 특징 및 잦은 추경예산의 문제점
- 4 추가경정예산안의 체크 포인트
- 5 타시도의회 언론보도

정책 동향

- 1 (기경위) 일본의 여성고용 활성화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 2 (행문위)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_충청권 중심으로
- 3 (복환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비대면 건강관리
효율화 방안
- 4 (농수해위) 신 농식품 마케팅 전략 : 라이브커머스
- 5 (건소위)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 6 (교육위) 2023 교육여론조사(교육통계) 결과 및 시사점

충청남도 및 교육청 주요 정책 이슈

- 1 (기경위) 충남 국립의대 신설 정책
- 2 (복환위) 충청남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 3 (건소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하여

세입징수 실적

- 1 국 세
- 2 지방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I. 이번달 주제

추가경정예산 제도

추가경정예산 제도

□ 추가경정예산 개념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말함
- 예산은 원래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한 해에 한 번 편성해야 함
 - 하지만 예산이 실행단계에 들어간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정부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 또는 경정(更正, 바르게 고침)하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를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함(추가경정예산을 줄여 추경 또는 추경예산이라고 함)
 - 추경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수정하는 수정예산과 다름

□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장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I. 이번달 주제

추가경정예산 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참고자료: 류춘호, 2023. 예·결산 주요 쟁점 분석 강의 자료 p76.

□ 예측하지 못한 사유 발생

- 예산은 실제로 집행 1년 전에 편성하므로 장래의 모든 사업계획과 소요금액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곤란
- 당초예산 집행 중 재정환경 변화가 있으면 예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요인이 됨

□ 국가재정 추경에 따른 연계

- 국가재정에서 국가재정법 제89조의 요건 등에 따라 추경이 편성되고, 국비에 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이 연계되어 추경이 편성되는 경우

□ 국가의 재정지원액 변경

- 중앙재정 출납폐쇄 및 결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등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정책 변경이나 국세 징수액 증액 등으로 지원 재정의 내용 및 규모 변화, 재원의 변경(균특↔기금)
- 예산이 편성된 후 국비가 당초 편성액보다 증액 또는 감액교부되면 추경안을 통해 기 편성된 국비를 세입·세출예산에서 증감 조성하고 이에 대응되는 시비도 세출예산에서 조정

□ 여유재원의 인식과 효율적 운영 등

- ①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결여 및 지방세입 기반 여건 변경 등으로 초과 세입의 발생
② 연도말 초과 세입의 순세계잉여금 편성(예비비+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③ 연도말 정리추경에 따른 여유자원 발생 ④ 회계연도 출납폐쇄에 따른 가용자원 인식 등에 따른 여유재원의 활용

□ 지역의 특수성 반영

- 대규모 메가 이벤트 및 국제행사 개최 지원
- 지역의 재난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 상황에 예비비 및 재난재해기금으로 대처가 불가능한 경우

[참고] 국회예산정책처 추경안 편성 일반 요건 기준

요건	세부내용	비고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 해소할 수 있을 것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 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30. 재인용

□ 「국가재정법」 제89조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I. 이번달 주제

추가경정예산 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참고자료: 신해룡, 「지방예산결산심사론」p422~431

□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

- 첫째, 추가경정예산은 여건 변화에 적응하는 도구임. 추경은 성립된 예산을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수정하는 것이므로 변화에 대응하는 도구임(예산집행의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함)
- 둘째, 추가경정예산은 전략상 이용함. 추경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용되는 것이지만 때로 '예산성립 전부터 존재했던 사유'를 위한 경비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대 지방의회 전략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사용할 수 있음.
- 셋째,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운영을 형식화할 우려가 있음. 일년에 몇 번씩 추경예산을 통하여 변경된다면 예산관련자들은 편성과정과 심의과정에서 당초예산이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계획단계부터 내실있게 수립하지 않거나 심의를 열심히 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잦은 추가경정예산편성의 문제점

- 첫째, 추경예산의 운용이 빈번해지고 그 규모가 커지면 예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 불필요한 예산의 증가로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자원의 낭비 초래됨
- 둘째, 지방정부는 보조금의 교부액이 변경될 때마다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빈번한 보조금의 교부는 필요한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활동에 있어서 일관성과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됨
- 셋째, 본예산에 포함되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어렵게 함
- 넷째, 추경예산을 운용하게 되면 편성에서부터 최종심의로 확정될 때까지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동원됨으로써 인적·물적 행정력이 소모됨
- 다섯째, 추경예산은 지방자치단체활동의 재원인 관점에서 본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심의강도는 미약하고, 거의 기계적으로 심사함

I. 이번달 주제

추가경정예산 제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체크 포인트

참고자료: 신해룡, 「지방예산결산심사론」 p432-433

I. 추경예산안 총괄

- 추경예산안 사유와 시기의 타당성 여부 체크
- 추경예산안의 연내집행 가능여부 및 이월을 전제로 한 추경예산 여부 체크

II. 세입예산안

- 추경세입재원의 타당성 체크
- 정상적인 추가세수가 확실함에도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계상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유
- 본예산 확정 후 여건변화에 의한 세입의 결함 또는 추가분의 예산반영 여부
(지방교부금 정산 등)

III. 세출예산안

- 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의 추경계상 여부 체크
-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수행 여부
- 이미 집행한 경비의 추경 계상 여부
- 특정 목적을 위한 추경편성 여부
- 예비비 추가계상일 경우 그 타당성 및 적정 여부



I. 이번달 주제

추가경정예산 제도

타시·도 의회 언론보도

① [△△시의회] 서○○ △△시의원 “예산, 원칙없이 즉흥적·감정적 편성안돼”

[오마이뉴스] _ 2024. 3. 4.

- ▷ 경기 △△시의회 서○○ 의원이 4일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신○○ 시장이 예산 편성을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편성했다”며 비판
- ▷ 서 의원은 이날 집행부의 원칙 없는 예산편성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신 시장은 2024년 예산 편성시 사업평가, 불필요한 예산정비, 민생경제와 맞춤형 예산편성 등 합리적 예산안을 편성하기 보다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를 들어 본예산의 각 사업예산을 40%씩 일괄 삭감했다”며 “이번 임시회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일괄 복구했다”고 지적
- ▷ 이어 “두 달여 사이에 시의원도 모르게 △△시 재정수입이 극적으로 증가한 요인이 무엇이나”고 지적
- ▷ 그러면서 “예산 편성은 △△시 한 해 살림의 재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시장님의 초보적인 행정능력과 비합리적, 비상식적 예산 편성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우려가 깊다”고 강조

② [□□구의회] “□□구 삭감예산 끼워넣기 추경·의회 경시”

[전남매일] _ 2024. 2. 1.

- ▷ 국○○ □□구의원이 1일 열린 □□구의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주민 불편을 불모로 1월 추경을 신청할 당시 연말 삭감 예산을 끼워넣었다”고 지적
- ▷ 국○○ 의원은 “1월 추경은 정부의 주민 생활안정자금 집행, 재난·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하고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사비, 집기류 구입비 등 시급한 예산은 없어 보임에도 주민 편익을 위한 예산만 편성한다는 □□구의 요구에 추경 심의 일정을 잡았다”고 밝힘
- ▷ 이어 “동 미래 발전계획 수립 예산은 구체성과 공감대 부족 등으로 본 예산 심의 시 삭감됐음에도 당초 약속과 달리 끼워넣기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며 “주민 불편을 불모로 연말 삭감 예산 끼워넣기는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니냐”고 질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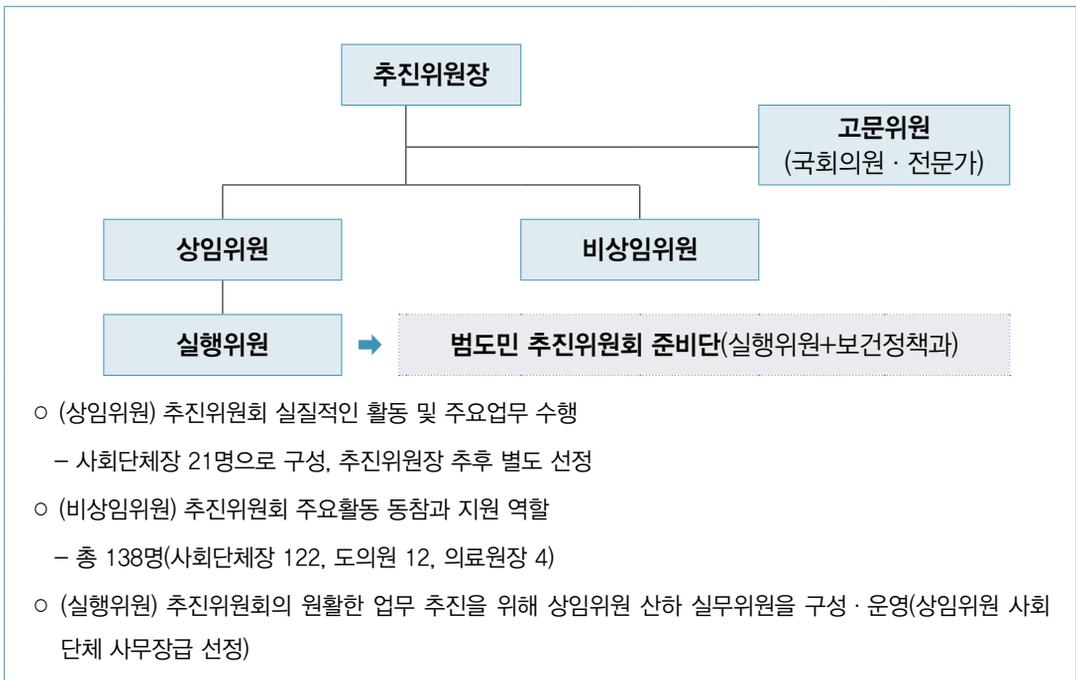
II. 주요 정책 이슈

충청남도 및 교육청 주요 정책 이슈

(기경위) 충남 국립의대 신설 정책

□ 도내 국립의대 설립 추진 현황

- 도 복지보건국 보건정책과 지역의대유치TF팀 신설(2023. 1. 16.)
 - 사무관 1명, 행정6급 1명으로 조직을 신설하여 지역의대 유치 및 대학병원 설치 지원 총괄
- 충남 의대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 구성
 - 충남 의대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 구성계획 수립(2023. 11. 10.)
 - (역 할) 기자회견, 결의대회, 서명운동 전개, 정책포럼 또는 토론회 개최 등
 - (구성체계) 총 182명: 위원장 1, 상임 20, 비상임 138, 고문 23



○ **충남 의대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최(2023. 12. 15.)**

- (1부 행사) 추진위원회 소개, 출범 선언, 결의대회 및 퍼포먼스
- (2부 행사) ‘충남 필수의료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기조발언 및 패널토의

○ **충남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과 관련 도내 국립의대 설립 강력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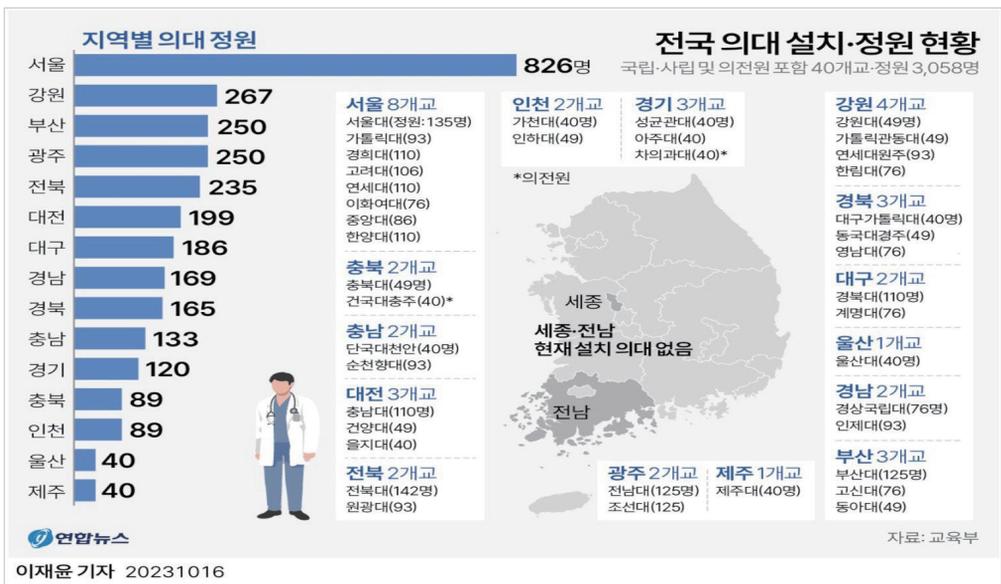
(제50차 충청남도 실국원장회의 시)

- 충청남도 보도자료(2024. 2. 13.)에 따르면,
 - 충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며, 서남부권은 심뇌혈관이나 응급 등 중증 및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
 - 정부가 이번 발표한 계획에는 지역 국립대 설립이 명시되지 않음
 - 도는 부지확보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정부의 결정만 있으면 즉시 추진 가능한 만큼 국립의대 설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

□ 전국 의대 설치·정원 현황

○ **전국 의대는 40개교 설치되고 정원은 3,058명**

- 이 중 수도권인 서울·경기에 11개교(27.5%), 946명(30.9%)으로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함
- 의대가 설치된 40개교 중 국립의대는 10개교로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만 국립의대가 설립되지 않았으며 세종에는 국·사립의대 모두 미설치



□ 의대정원 확대 개요

○ 2025년부터 2000명 증원

-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목표로 1만 5천 명을 수요로 측정하고,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기로 함
-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
-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대학별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배정

-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함
-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기준*을 토대로 이뤄졌음

* 기준 1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

기준 2 :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요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

기준 3 :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

- 2025년부터 증원되는 2000명은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서울은 배정하지 않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함
- 총 14개 지역, 32개교의 학교에 배정 규모를 보면, 대구광역시가 218명으로 증가인원이 가장 많고 충청북도가 211명으로 그 뒤를 이음
- 충청남도는 현 정원 133명에서 137명이 증원되어 270명(103.0%)임

〈 지역별 · 대학별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배정 현황 〉

(단위 : 명)

지역	대학명	현 정원	증가인원	최종 정원	증원비율
14개 지역	32개교	2,240	2,000	4,240	89.3
인천광역시 (2개교)	소계	89	161	250	180.9
	인하대학교	49	71	120	144.9
	가천대학교	40	90	130	225.0
부산광역시 (4개교)	소계	343	157	500	45.8
	부산대학교(국립)	125	75	200	60.0
	인제대학교	93	7	100	7.5
	고신대학교	76	24	100	31.6
	동아대학교	49	51	100	104.1
울산광역시(1개교)	울산대학교	40	80	120	200.0
대구광역시 (4개교)	소계	302	218	520	72.2
	경북대학교(국립)	110	90	200	81.8
	계명대학교	76	44	120	57.9
	영남대학교	76	44	120	57.9
	대구가톨릭대학교	40	40	80	100.0
광주광역시 (2개교)	소계	250	100	350	40.0
	전남대학교(국립)	125	75	200	60.0
	조선대학교	125	25	150	20.0
대전광역시 (3개교)	소계	199	201	400	101.0
	충남대학교(국립)	110	90	200	81.8
	건양대학교	49	51	100	104.1
	을지대학교	40	60	100	150.0
경기도 (3개교)	소계	128	200	328	156.3
	성균관대학교(이원화캠퍼스)	40	80	120	200.0
	아주대학교	48	80	128	166.7
	차의과학대학교	40	40	80	100.0
강원특별자치도 (4개교)	소계	267	165	432	61.8
	강원대학교(국립)	49	83	132	169.4
	연세대학교(분교)	93	7	100	7.5
	한림대학교	76	24	100	31.6
	가톨릭관동대학교	49	51	100	104.1

지역	대학명	현 정원	증가인원	최종 정원	증원비율
경상북도(1개교)	동국대학교(분교)	49	71	120	144.9
경상남도(1개교)	경상국립대학교(국립)	76	124	200	163.2
전북특별자치도 (2개교)	소계	235	115	350	48.9
	전북대학교(국립)	142	58	200	40.8
	원광대학교	93	57	150	61.3
충청북도 (2개교)	소계	89	211	300	237.1
	충북대학교(국립)	49	151	200	308.2
	건국대학교(분교)	40	60	100	150.0
충청남도 (2개교)	소계	133	137	270	103.0
	순천향대학교	93	57	150	61.3
	단국대학교(이원화캠퍼스)	40	80	120	200.0
제주특별자치도(1개교)	제주대학교(국립)	40	60	100	150.0

※ 출처: 교육부, 네이버

○ 의사 파업을 대면한 정부의 과제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월 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파업에 돌입,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대응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약 74% 수준인 9,275명에 달하고 있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수술 지연, 진료거절, 진료예약 취소, 입원 지연 등 피해 신고가 지속되는 등 환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겪는 심각한 상황임
-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개혁이 국민의 의료서비스 확충과 개선이라는 본질에 맞춰 국민의 고통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합의점 마련과 사회의 안정을 되찾는데 온갖 노력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

□ 충남도의 국립의대 설치를 위한 도-의회 협력 강화

-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국립의대가 없는 충남 도내에 국립의대 신설계획이 함께 발표될 수 있도록 도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시군과 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조속히 달성해야 할 것임

II. 주요 정책 이슈

충청남도 및 교육청 주요 정책 이슈

(복환위) 충청남도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주요 내용¹⁾

- **사업목적:** 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주거 등 돌봄서비스와 재가 의료서비스 연계를 통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형 마련
- **사업기간:** 2023. 7. ~ 2025. 12. (2년 6개월 간)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합계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23년	1식	520,000	335,000	260,000	75,000	185,000
2024년	1식	1,075,000	705,750	537,500	168,250	369,250
증 감	-	555,000	370,750	277,500	93,250	184,250

※ 재원율: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사업지역:** 천안시(2023년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 선정)
 - ('23. 2월) '23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시행
 - ('23. 3월) 우리 도 시범사업 '천안시' 최종 선정(전국 12개 시·군·구)

[참고] 참여 지자체(9개 시·도, 12개 시·군·구)

-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진천군

1) 출처: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경로보훈과

- ('23. 7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 충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모형 개발 및 15개 시·군으로 확대 예정

[참고]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적

- 15개 사업 1,185건, 대상자 519명에게 서비스 제공
- ※ 2023년도 목표 대상자(500명) 103. 8% 달성

- **사업대상:**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병원 퇴원자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 1,200명

유형		전체 대상인원	시범사업 대상자	23년 대상자	비고
합 계		17,035	1,200	500	
우선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자	4,127	360	150	7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등급외자	925	290	120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	69	40	15	
	퇴원환자	11,309	150	65	
일반	사각지대 대상자*	605	360	150	65세 이상 노인

* 지역케어회의에서 읍면동 사례발표를 통해 돌봄 필요도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

[참고] ①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
-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 급성기 병원, 요양병원에서 퇴원 후 2주 이내의 환자
- 의료와 돌봄서비스 제공이 임시 또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노인

③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

-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 판정 전이거나,
-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거동이 불편하여 주변의 돌봄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노인

④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우선관리 대상자 비율(①-③ 순으로 확보) 70% 이상

- ①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40% 이상, ②퇴원환자 10%, ③노인맞춤돌봄 중점 돌봄군 및 장기요양 등급외자 20%

○ 사업추진체계

대상자 발굴·접수	필요도 조사	계획 수립	지역케어 회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종결
읍면동, 보건소, 의료기관	읍면동		천안시	제공기관	천안시, 읍면동

○ 사업 서비스 내용

분야	서비스	주요내용	제공기관
방문 의료	재택의료	• 거동불편자 방문진료와 가정간호	천안의료원
	예방의료	• 정신과 방문상담, 노인성질환 검사 지원	천안시의사회
	한의진료	• 침, 뜸, 부항 등 한의 방문진료	천안시한의사회
	복약지도	• 약물 정보 및 보관방법 교육	천안시약사회
	방문재활	• 재활치료를 통해 동작능력 회복	새로나병원
			천안재활병원
구강건강관리	• 위생관리, 구강맛사지 등 맞춤 중재	단국대학교 치위생학과	
퇴원 환자 재가 복귀 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 의료기관을 통한 퇴원환자 발굴 및 지자체 연계로 신속한 돌봄 제공	천안의료원
			천안충무병원
			새로나병원
			천안재활병원
의료돌봄	• 퇴원환자 대상 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회복 지원	새로나병원	
		천안재활병원	
틈새돌봄	• 퇴원환자, 장기요양대기자 대상 일시적 돌봄 - 방문요양, 가사지원, 방문목욕, 외출동행	천안종합재가센터	
재가의료급여	• 장기입원 의료급여환자의 재가복귀 지원 - 의료, 돌봄, 식사, 주거개선, 안전관리 등	천안시 복지정책과	
일상 생활 지원	노인맞춤 돌봄	• 안전지원(안부확인, 응급안전) • 일상지원(가사지원, 외출동행) • 생활 및 건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아우내은빛복지관
	방문가사	• 식사, 청소, 빨래 등 가사 지원	천안종합재가센터
방문목욕	• 전용차량을 이용한 담금목욕	서로사랑노인복지센터	

일상 생활 지원	영양지원	• 도시락 및 밑반찬 정기 지원	즐거운밥상
	외출동행	• 차량을 통한 외출전반 동행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서로사랑노인복지센터
	반려로봇	• 시로봇으로 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 식사·복약시간 알림, 말벗 등	천안종합재가센터
건강 관리	방문건강관리	• 건강위험요인 파악, 기본건강관리·개선	읍면동 / 보건소
	치매사례관리	• 치매위험군 : 치매 진단검사 지원 • 치매진단자 : 물품 지원 등 사례관리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 1:1 멘토링	• 정신건강위험군 1:1 멘토링 사례관리 - 안부확인, 자살예방교육, 힐링캠프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 주택 제공으로 안전한 독립생활 지원 -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천안시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단열·창호·바닥공사, 난방·냉방기 지원	천안주거복지센터
	주거환경개선	•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집수리	천안주거복지센터
	웰빙홈컨설팅	• 주거환경 평가 및 컨설팅, 복지용구 지원	작업치료사회회 충청지회
	스마트홈	• AI·IoT 기술 활용, 비대면 일상돌봄	천안종합재가센터
	방역소독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기적 방역소독	죽전직업재활원
특화 사업	통합돌봄센터 조성·운영	• 대상자 중심 통합적 재가서비스 제공 - 방문서비스(요양, 목욕, 간호), ICT관제센터	천안시 도시재생과
	케어안심주택 조성·운영	• 거동불편 퇴원환자에게 임시보호시설에서 의료·돌봄으로 회복 및 재가복지 지원	천안시 도시재생과

□ 검토의견

- (체계성)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분야별 욕구에 맞추어 보건 의료-요양-생활-주거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대상자의 발굴과 접수, 필요도 조사,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그리고 모니터링 및 종결까지의 체계적인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기존 돌봄사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성과 평가,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접근성) 방문 의료,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일상생활지원, 건강관리, 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며, 노인들과 그들의 보호자들이 이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함
 - 도민 교육 홍보를 통해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확산될 때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정착될 것임

- (협력성) 지역의 자원과 기존 유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유사 서비스 중복지원은 지양하고, 전문인력(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사례회의 운영과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야 함
 - 천안시의 시범적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도내 시군으로 확대 필요

[참고] 충청남도 노인인구 현황

○연령별 노인인구 현황

(2024년 1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단위: 명, %)

구분	전체인구	합계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100세이상
충남	2,130,509	456,141 (21.4)	147,168	101,448	77,572	67,330	43,214	15,745	3,159	505

○시도별 노인인구 비율

(2024년 1월 통계청 기준 /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8.6	22.7	19.7	16.7	16.6	17.1	16.0	11.1	15.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1	21.0	21.4	24.2	26.2	24.8	20.7	18.0	

※ 전국노인 인구비율 19.1% (시도별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충남 순)

○노인인구 고령화 추이

(충남 : 2007년 고령사회, 2023년 초고령사회 진입)

구분		2006	2017	2019	2021	2024	2029	2035	2040	2045
충남	천명	273	351	374	410	469	590	727	839	915
	%	14.1	16.3	17.1	18.4	20.6	25.1	30.2	34.5	37.8

※ 통계청 추계자료

II. 주요 정책 이슈

충청남도 및 교육청 주요 정책 이슈

(건소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하여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 규정

□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 할 수 있다.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배경

○ 광역행정수요의 증가

- 인구구조의 변화와 교통·통신 등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행정구역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어 행정적 경계는 다르지만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을 구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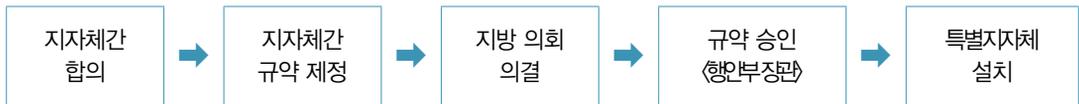
○ 자치단체 간 기존 광역협력 제도의 효과 한계

- 자치단체 간 광역협력을 위해 협력사업,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활용되어 왔음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법인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력관리에서 기관장의 실질적인 통할권이 미흡하고, 재원관리에서 정책적 비중에 따라 분담금의 안정성이 취약하며, 조직관리에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관여로 자율성이 낮은 문제가 있었음

○ 행정수요에의 탄력적 대응 필요성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간 규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지면서도 전체 행정사무가 아닌 특정 광역행정사무의 공동 대응을 위해 관할구역과 운영방식의 변경이 비교적 용이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절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사례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 목적 : 수도권 과밀화 극복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동북아 8대 메가시티 구축
- 2021. 7. 29.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식 개최
- 2022. 3. 18. 특별지자체 규약 행정예고 및 시도의회 의결
- 2022. 10.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무산

⇒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 변동, 지역 이익 제고의 불확실성, 구성지자체의 과도한 예산 투입 예상 등으로 추진 재검토

○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을 통하여 더 많은 재량권과 자원을 확보하여 지역혁신 도모
- 중장기적으로 행정통합 추진, 단기적으로 광역교통, 관광문화, 통합 신공항 등을 추진
- 추진일지
 - 2020. 9. 21.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
 - 2020. 12. ~ 2021. 1. 시도민 열린 토론회
 - 2022. 3.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구성·운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마련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조직으로 22.1.29. 행정안전부 한시기구로 승인)
⇒ 지방선거 이후 대구와 경북의 공론화 미흡으로 논의를 잠정 보류
 - 2022. 7. 4.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 폐지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란?

-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가균형발전 저해, 지역소멸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세종·충북·충남이 함께 설립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명칭은 “충청지방정부연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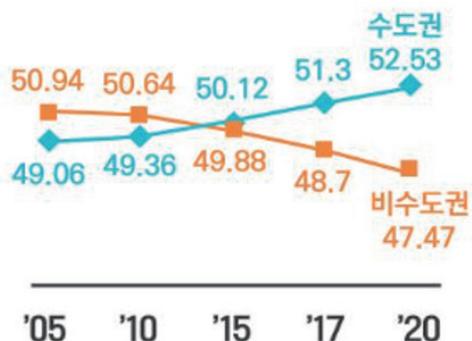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

- 수도권 집중현상의 지속 강화로 지역의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역 소멸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 광역행정체제 구축 필요
-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충청권의 우수한 지역성장 잠재력을 활용하여 국가혁신 성장거점으로 발돋움

✓ 인구비율



✓ GRDP 비중 추이(%)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목표 및 전략

구 분	주 요 내 용
목 표	▶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축
전 략	▶ 충청권 광역철도 등 초광역인프라 구축을 통한 단일 생활경제권 형성 ▶ 첨단바이오헬스·미래모빌리티부품 등 전략산업 육성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 모델 실현
기대효과	▶ 전략산업 육성으로 충청권 지역경제 활성화 ▶ 광역 교통망 확대로 경제공동체 및 3050생활권 형성 ▶ 일선 국가사무 위임으로 선도적 지방분권 모델 확립 ▶ 공통사무의 통합 운영으로 주민제공 행정서비스 효율 제고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일지

- 2022. 3. ~ 11.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
- 2022. 5. ~ 12. 충청권 초광역협력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2022. 8. 29.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한시기구 구성 합의
- 2022. 10. 21. 행정안전부,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한시조직 승인
- 2023. 1. 31.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출범
- 2023. 11. 30. 4개 시도의회 의장, 충청권 특자체 의회 의석(16석) 균등 배분 합의
- 2024. 3. 15. 대전광역시의회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의결
- 2024. 3. 19. 충청남도의의회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의결
- 2024. 3. 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의결
- 2024. 3. 22. 충청북도의의회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의결
- 2024. 4월~ (이하예정) 행정안전부 승인 및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 충청지방정부연합의 사무

○ 시도이관사무

-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
- 광역철도 사업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무
-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초광역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무
-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무
- 초광역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에 관한 사무
- 초광역 주요 산업 연계 및 육성에 관한 사무
- 초광역 미래모빌리티부품 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 초광역 첨단 코스메틱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 초광역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
- 초광역 지역기업 육성 및 통상 지원에 관한 사무
- 초광역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무
- 초광역 농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 초광역 지역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무
- 초광역 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 초광역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무
- 초광역 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 중앙행정기관 위임사무

-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 검토의견

- 특별지방자치제도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으며, 인사·조직권과 조례·규칙제정권이 부여되고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협력제도들에 비해 자치권 보장이 향상된 제도로 평가되고 있음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출범하면 인구 560만, 지역총생산 250조원에 이르는 초광역메가시티가 형성됨으로서 광역교통망 구축, 전략산업 공동 육성 등 충청권 경제활성화를 통한 충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경험 부족,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거래비용 증가, 복잡한 이해관계, 지역사회 내 공감대 부족 등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성공적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위해서는
 - (주민 의견수렴) 먼저 메가시티 조성의 당위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 지역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메가시티의 필요성 인식 및 홍보 부족
 - (사전 철저한 준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초광역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은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변화에 따른 취약성이 있음. 지자체 간 구체적인 사업과 재정배분을 놓고 갈등이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고 절차상 필요한 주민 합의과정도 수월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 관련 지자체와 주민, 그리고 정치권이 올바른 인식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
 - (선택과 집중)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지자체간 상호조율을 통해 한목소리로 유치 신청하여 선택과 집중 필요

(기경위) 일본의 여성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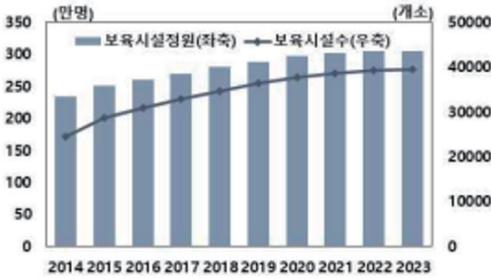
□ 여성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배경

- 일본정부는 1986년 남녀고용균등법* 시행 이후 여성의 경제참여 유도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으나 2012년 이전까지 성과는 다소 저조
 - * 1986년 시행당시에는 채용·배치·승진시 남녀의 동등한 취급을 벌칙이 없는 노력의무로 규정 하였으나 1999년 개정시 이를 벌칙이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
-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력부족이 심화되면서, 2013년 2차 아베 내각수립 이후 일본정부는 핵심성장전략으로서 여성고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
 - * 일본 생산가능인구는 95년 87.2백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를 이어가고 있으며 총인구도 2011년(1억2,8백만명) 이후 감소
 - 2012년중 일본 여성고용은 경력단절에 따른 “M자 커브” 현상이 현저하고 비경제 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가 남성의 약 2.6배 수준인 303만명에 달하는 등 유휴노동력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부각

□ 여성고용 활성화 정책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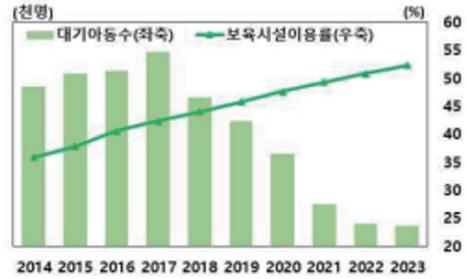
- 일본정부는 2015년 여성활약추진법(2016년 시행)을 제정하여 기업의 여성고용 확대를 장려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확충, 보육시설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유인을 제고
 - 여성활약추진법은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게 여성고용 확대와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를 위한 행동계획 수립 및 관련 정보 대외공표 등을 의무화
 - 보육시설의 꾸준한 확충을 통해 시설수와 정원을 크게 확대(보육시설수: 2014년 24,425개소 → 2023년 39,589개소, 정원: 2,335,724명 → 3,050,928명)하는 등 대기아동축소를 위해서도 노력

보육시설수 및 정원



자료: 어린이가정청

보육시설이용률 및 대기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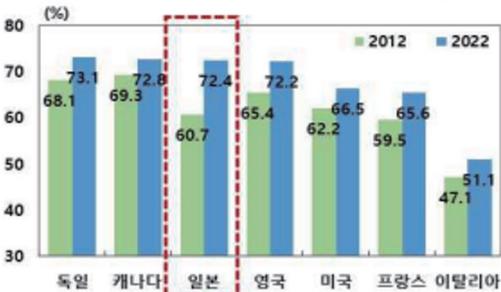


자료: 어린이가정청

□ 여성고용 활성화 정책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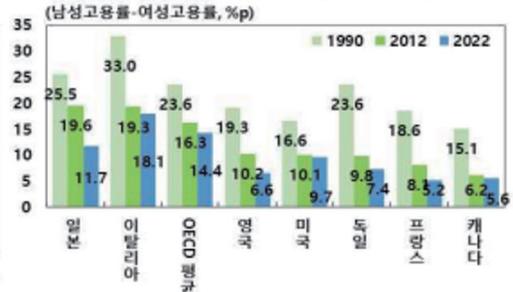
- 여성고용 활성화정책 추진 이후 여성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수가 큰 폭 증가하고 고용률도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
 - 2023년 15-64세 여성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수는 2012년 대비 각각 205만명, 245만명 증가하면서 전체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절반 이상 견인
 - 2022년중 일본의 여성고용률은 G7중 세번째로 높은 수준(72.4%)을 기록하였으며, 성별 고용률 격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까지 축소

G7 여성 고용률(15-64세, 2022년)



자료: OECD

성별 고용률 격차(15-64세)



자료: OECD

- (연령별) 대부분 연령대에서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큰 폭 상승하였으며, 특히 30대에서 큰 폭 상승하면서 M자 커브도 완화(2012년→ 23년: 30-34세 +14.5%p, 35-39세 +13.4%p)
- (혼인상태별) 미혼보다 유배우 여성, 특히 2-30대 유배우 여성의 고용률 상승폭*이 컸으며, 이에 따라 맞벌이세대 비중도 크게 확대(2012년 57.3%→ 23년 71.2%)
 - * 유배우여성고용률: (30-34세) 2012년 56.2%→ 2023년 75.4% (35-39세) 60.6%→ 74.6%
 - 첫째아이 출산 후 계속 취업을 선택하는 여성의 비중도 큰 폭 증가(첫째아이 출생연도 기준, 2010-14년 42.4%→ 2015-19년 53.8%)

- (기업규모별) 여성활약추진 의무*가 있는 100~499인, 5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용률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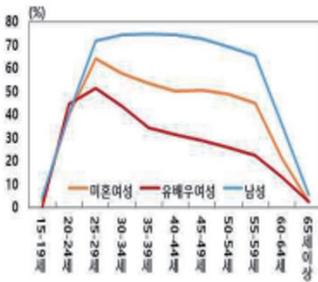
* 2016.4월부터 301인 이상 기업, 국가·지자체, 2022.4월부터 101인 이상 기업도 포함

□ 향후 정책과제

I. 잔존하는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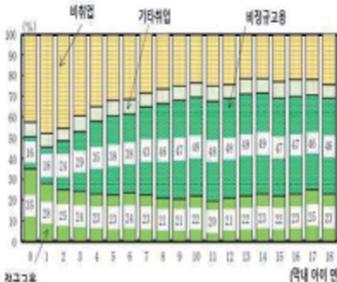
- 여성 고용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17.3%)의 약 3배에 달하는 높은 비정규직 비율(2023년 15~64세 50.2%)과 현저한 성별임금격차 등 기존 질적격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
- 일본 여성고용은 30대를 기점으로 정규직 고용률이 급락하는 “L자 커브” 현상이 여전히 뚜렷하며, 여성 관리직 비중도 매우 낮은 수준
 - 남성 정규직 고용률은 25세~60세까지 70%대 수준이나 여성은 30대를 기점으로 정규직 고용률이 급락하며, 유배우 여성일수록 급락세가 가파른 경향

정규직 고용률(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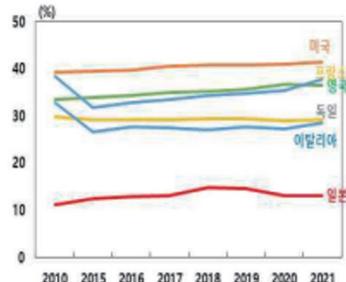
자료: 총무성

자녀연령별 여성 고용형태



자료: 내각부 2023년도 일본경제 리포트(2024), 전국취업실태패널조사 2016-23년

여성 관리직비중



자료: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ILO

- 일본의 성별임금격차를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여성의 낮은 정규직 비중, 낮은 관리직 비중, 정규직 여성의 짧은 근속연수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내각부 경제재정백서, 2022)
- 본 여성고용의 질적 개선이 더딘 것은 정규직의 장시간·경직적 근로 관행, 불충분한 보육환경 등으로 아직도 정규직 업무와 가정의 양립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

II. 향후 과제

- 일본내 주요 전문가들은 여성고용 관련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과 고용관행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
 - 장시간근로 시정, 근무방식 유연화 등을 통해 남성이 가사·육아를 분담하기 쉬운 환경 조성이 긴요(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일본총연, 大湾秀雄 와세다대 교수 등)
 - 장시간근로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가 종신고용·연공서열 등 일본식 고용관행과 결부되어 있는 점 감안시 노동이동 원활화, 직무형 고용으로의 변화도 필요(周燕飛 일본여대 교수, 내각부 2023년도 경제재정백서 등)
 - 일본정부는 장시간 근로, 가사·육아부담 편중, 고정적 성별역할분담 의식을 여성활약의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

※ 출처: 한국은행 동향분석(동경사무소), 2024. 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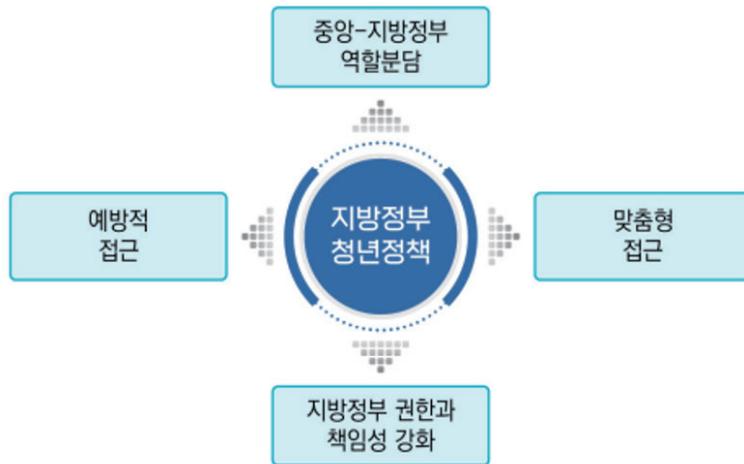


(행문위)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 충청권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 청년정책 방향(안)

-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두 가지를 제안
- 정책 대상자인 청년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 대해서는 예방적 접근과 맞춤형 접근 등 두 가지를 제안

[그림 6-1] 지방정부 청년정책 방향(안)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 대상 중심 정책의 추진은 대체로 중앙정부가 재정을 맡고 지방정부는 정책 전달과 서비스를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
- 청년정책에 있어서는 이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같은 충청지역에서도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의 특성이 다르고 청년정책 수요 역시 다른 상황에서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정부는 기획된 정책을 수동적으로 실시하는 형식의 정책 전달은 타당성과 효과성이 낮음

- 정책 전달과 서비스는 지역 간에 편차가 존재하므로 국가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적절한 사업 내용과 규모를 결정하여 지역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사례] 국무조정실 청년거점센터

- 2022년부터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청년거점센터를 마련하고 센터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직무연수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 2023년 2월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지자체 청년센터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 2024년부터 중앙청년지원센터와 지역청년거점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설치할 예정

○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 정책의 기획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정책 목표와 원칙을 정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받아서 수행하는 수직적인 관계 설정보다는 지방정부가 정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수평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함
-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정책 목표와 원칙을 유지하되,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으로 변환하여 시행하는 형식이 바람직

[사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지자체가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을 기획하고 만든 후에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청년정책 사업임
- 2008년부터 추진되었으며 1단계(2018-2021년)에 이어 2단계(2022-2024년) 사업이 추진 중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같이 지방정부 주도하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과정에서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제안

○ 청년 맞춤형 접근

- 청년수당과 같은 재정사업은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이 원칙인 포괄적 서비스인 반면, 어떤 사업은 특정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사업이 될 필요가 있음

[사례] OECD에서 제시한 청년행동계획 우선지원대상(2014)

- 청년 니트(NEET)²⁾를 위한 예방적 개입으로 졸업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을 줄이는 방안
- 빈곤의 대물림을 타파하기 위한 취약 지역에서의 포괄적 개입과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한 공간 제공 등 역시 맞춤형 접근
- 주거와 법률, 건강, 교육을 비롯하여 예술과 문화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 지원서비스 등 모든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랑스의 종합청년정보센터(Centre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jeunesse, CIDJ)는 각 지역 청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작동

2)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 무직 상태이면서 취업이나 교육 훈련을 받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공부를 하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신조어

○ 예방적 접근의 강화

- 은둔청년을 발굴하고 개입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자원이 소모되지만 그에 비해 실제 정책개입의 효과는 미약하므로 가장 바람직한 정책 개입 시점은 청년들이 실업자나 미취업 상태로 이행하기 전인 재학생이나 직업훈련 단계에서 예방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청년정책의 대상을 청년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와 연계한 생애 주기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 청년정책 과제(안)

- 전체 지자체를 포괄하는 정책과제(안)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시에 공동사무로 추진될 청년정책 과제(안)를 구분하여 제시

〈표 6-1〉 지방정부 청년정책 과제(안)

구분	정책과제(안)	주관부서
지방정부 청년정책	일자리-주거-교육-문화 공간 패키지 사업	(중앙)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청년정책부서, 일자리부서, 주거부서, 교육부서, 문화체육부서
	지역화폐-할인-바우처 통합형 청년카드 도입	(중앙)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청년정책부서, 기획조정부서, 일자리부서, 문화체육부서, 보건복지부서
	정책 서비스의 통합제공 전달체계 구축	(중앙)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지자체) 청년정책부서, 기획조정부서
	취약청년을 위한 아웃리치 서비스 추진	(중앙)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지자체) 청년정책부서, 보건복지부서
	기초와 광역의 대의제 형태 청년 원탁회의 추진	(중앙) 국무조정실 (지자체) 청년정책부서

○ 일자리-주거-교육-문화 공간 패키지 사업

-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기업)와 더불어 교육(학교), 주거, 문화공간 등을 연계한 복합 공간의 구성이 필요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포함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청년 주거를 중심으로 일자리, 교육, 문화 공간을 연계하는 캠퍼스 타운형 청년지원 패키지사업을 검토한 바 있음

[그림 6-2] 청년 지원 패키지 사업 개념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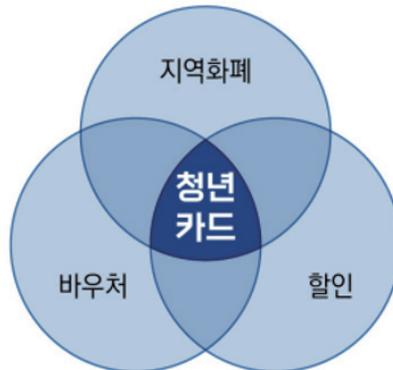


출처: (사)한국도시계획협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인토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사무소(2021: 113)

○ 지역화폐-할인-바우처 통합형 청년카드 도입

- 청년들은 취업 외에도 다양한 사회 및 문화생활 참여 욕구를 가지고 있어 이와 같은 사회문화 생활은 청년들의 성인기 진입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

[그림 6-3] 지역화폐-할인-바우처 통합형 청년카드 개념도



- 이와 같은 사회 문화생활 참여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EU의 경우에는 유럽청년카드 (European Youth Card) 발급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
- 우리나라에서는 지역화폐를 비롯하여 바우처 등과 연계해 지역 할인혜택을 주는 지역 청년카드 발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목표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직접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서비스도 카드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정책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도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카드를 지역 내 상권 및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문화 산업의 활성화와 연계할 수도 있을 것

○ 정책 서비스의 통합제공 전달체계 구축

- 지자체 청년센터가 전달체계이자 게이트웨이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신청과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함
- 게이트웨이 역할 수행에 있어서 종합 안내 및 지원 연계는 핵심적인 업무이므로 공통 핵심업무로 다룰 필요가 있음(지자체 청년센터의 청년정책 정보제공)

〈표 6-2〉 지자체 청년센터 공통 핵심 업무 및 인력(안)

구분	업무		세부내용	인력
공통 핵심 업무	사업 신청 및 관리	중앙정부	마음건강바우처 등 중앙정부 사업 신청 및 관리 역할	2명
		지자체	서울시 청년수당 등 지자체 사업 신청 및 관리 역할	
	종합안내 및 지원연계		청년의 종합적 상태와 욕구 파악, 상담지원, 지원기관 연계	2명
	청년지원 정보제공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정책 사업정보, 지역 정보 제공	
청년 공간 운영		청년이용공간 제공, 청년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명	
센터 자율 업무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모임 운영 및 지원		1명
	기타 지역자율 프로그램	지역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행정업무	인사, 회계, 시설관리	지자체 청년센터 운영 관련 인사, 회계, 시설관리 업무		2명
총괄업무	센터 운영 총괄	지자체 청년센터 센터 업무 총괄, 대외 협력 등		1명

출처: 김형주, 김기현, 배정희, 신선미, 기현주(2022: 315). 〈표 4-4〉 인용

- 지자체 청년센터 종사자들의 고용형태나 복지를 비롯한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므로 임금이나 복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해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센터 운영에 있어서 거버넌스 문제 역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국가와 광역, 기초에서 모두 역할이 주어지는 전달체계로서의 위상을 갖게된다면 센터 운영위원회가 자문을 넘어서 심의, 조정, 의결기구로 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고 정부 추천과 광역시 추천, 기초 추천 인사로 운영위원을 선발하고 법률에 근거해 민간위촉시에는 청년위원을 반드시 두도록 제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취약청년을 위한 아웃리치 서비스 추진

-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정책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청년들을 찾아나서는 아웃리치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함

- 이와 같은 서비스의 예로는 핀란드의 청년센터 오호야모(OHJAAMO)를 살펴볼 수 있음. 오호야모에서는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센터 간 개인정보 연계와 아웃리치를 병행. 학교를 졸업하거나 도중에 학업을 중단한 청년들의 정보가 청년센터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일단 학교를 벗어난 청년들은 그냥 방기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센터에서 인계를 받게 됨. 이 과정에서 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센터에서 직접 주거지를 방문하는 등의 아웃리치를 실시

○ 기초와 광역의 대의제 형태 청년 원탁회의 추진

- 청년들의 참여가 현장의 많은 목소리로 시작해서 정책참여의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차 추려지면서 청년들을 대표하는 목소리로 이어지는 합의제 거버넌스 시스템 구성이 필요
- 이와 같은 사례로 유럽연합의 구조화된 청년 대화(EU Youth Structured Dialogue)가 있음. 구조화된 청년 대화는 지역사회의 청년대표 중에서 상위 참여기구의 대표를 선발하고 이 대표가 다시 다른 참여국가들의 대표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 사전협의하고 청년 부처협의회 중심의 정책안건을 선정해서 유럽연합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가짐

□ 충청권 통합 청년정책 과제(안)

- 현재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 중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와 관련하여 공동사무로 추진해야 할 청년정책 과제(안)를 제안하고자 함

〈표 6-3〉 충청권 통합 청년정책 과제(안)

구분	정책과제(안)	주관부서
충청권 메가시티 청년분야 공동사무	충청권 청년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공통)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지자체) 대전-경제과학국 일자리경제과, 세종-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충북-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충남-산업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충청권 학교-기업 연계	(공통)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지자체) 대전-경제과학국 일자리경제과,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세종-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충북-과학인재국 RISE추진과,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충남-산업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충청권 에라스무스+(Erasmus+) 추진	(공통)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지자체) 대전-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세종-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충북-과학인재국 RISE추진과, 충남-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충청권 청년수도(capital) 추진	(공동)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지자체) 대전-북지국 청년정책과, 세종-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충북-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충남-청년정책관
청년 주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운영체계 구축	(공동)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지자체) 대전-북지국 청년정책과, 세종-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충북-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충남-청년정책관

○ 충청권 청년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주도하고 중앙부처는 지역 조직에 협력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광역을 넘어서 초광역 차원에서 충청권 청년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
- 지역 고용 거버넌스는 지자체와 사업체와 노동조합 등 지역 경제주체, 고용지원센터, 훈련기관 등 지역 노동시장 주체가 지역 경제산업 여건 등에 부합하는 지역 일자리 정책을 협치적으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체계
- 지역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역의 재량권을 부여 필요

○ 충청권 학교-기업 연계

- 충청권에는 많은 대학이 있으나 이 지역 출신 졸업자들이 지역 내 대학이나 일자리로 취업하는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재학중인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학교-기업을 연계하는 조기개입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

[그림 6-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대학 지원 조직 체계(안)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3. 5. 17)

- 충청권 중 유일하게 선정된 충북은 지역정착형 지역 취업과 창업 우수대학을 육성하고 생애주기별로 직업과 평생교육 앵커대학을 키우며 미래첨단산업 연구역량 강화 선도 대학과 글로벌 문화창조 K-컬처 혁신대학을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함(교육부 보도자료, 2023. 5. 17). 충북에서는 4팀 22명으로 구성된 라이즈추진과를 신설했으며 충북의 라이즈센터로 충북연구원 산하에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를 3팀 13명 규모로 설치
- 학교와 기업 간 연계에 대한 방안을 만들고 충청권 전체에서 졸업 전에 학생들을 취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

○ 충청권 에라스무스+(Erasmus+) 추진

- 유럽연합은 기존에 운영하던 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2014년부터 모든 형태의 교육 훈련생들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확장하면서 이를 ‘에라스무스+’라고 명명
- 이 프로그램은 학교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 성인 교육, 청년, 그리고 스포츠의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64만 명의 청년들과 7만1천개 기관이 교환프로그램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성장. 이 연구에서는 이를 모델로 충청권의 통합 브랜드 사업으로 충청권 에라스무스+를 제안하고자 함
- 충청권 대학과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을 연계하여 참여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일단 충청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해서 정착된 이후에는 교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충청권 대학, 기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국가로도 확대하여 충청권 청년들을 위한 특화 교육 훈련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을 것

○ 충청권 청년수도(capital) 추진

- 2010년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을 시작으로 매년 유럽 청년수도(Youth capital)를 선정해옴. 이 청년수도의 선정은 유럽연합 회원국 청년들의 투표를 반영해서 이루어지며, 일단 청년수도로 선정된 도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청년 친화적 도시를 만들어갈 권한을 부여해 청년들이 제안하고 발굴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유럽연합에서는 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마찬가지로 충청지역 행정통합 단위에서 이와 같은 청년수도 선정과 청년친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청년 참여의 기회를 구체화하고 활성화함으로써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제도화하는 효과와 실제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도시재생 사례를 축적하는 효과를 모두 기대할 수 있을 것

○ 청년주도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운영체계 구축

- 충청권에서 공동으로 유치한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충청권 청년들이 자원봉사로 동원 대상으로 다루어지기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4개 시도 청년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각 시도의 청년정책 담당관 연석회의와 각 시도의 청년센터장들이 참여하는 사무국을 구성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 사무국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단에서 총괄하여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행사 조직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청년정책 과제(안) 추진 로드맵

- 지방정부 전체에서 추진해야 할 청년정책 과제(안)와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한 공동사무 과제(안)를 제안하였음
- 이 과제들의 성격과 추진 로드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6-4〉 청년정책 과제(안) 추진 로드맵

구분	정책과제(안)	추진 기간			거시/미시	신규/조정	법률·조례 제/개정
		단기	중기	장기			
지방정부 청년정책	일자리-주거-교육-문화 공간 패키지 사업			○	거시	신규	제정/개정
	지역화폐-할인-바우처 통합형 청년카드 도입	○			미시	조정	-
	정책 서비스의 통합제공 전달체계 구축		○		거시	신규	-
	취약청년을 위한 아웃리치 서비스 추진	○			미시	조정	개정
	기초와 광역의 대의제 형태 청년 원탁회의 추진	○			미시	신규	개정
충청권 메가시티 청년분야 공동사무	충청권 청년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	거시	조정	개정
	충청권 학교-기업 연계			○	거시	조정	개정
	충청권 에라스무스+(Erasmus+) 추진		○		거시	신규	제정
	충청권 청년수도(capital) 추진	○			미시	신규	제정
	청년 주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운영체계 구축	○			미시	조정	개정

- 충청권 메가시티 청년분야 공동사무의 정책과제(안) 중에서 장기과제로는 충청권 청년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충청권 학교-기업 연계 등이 있다. 지방정부의 협력거버넌스 구축은 매우 중요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
- 청년정책 사업 추진에 있어서 견고한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로 내려갈수록 이러한 필요성은 더 커지고 연계와 협력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자리와 교육에 관한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충청권 에라스무스+(Erasmus+) 추진은 중기과제로 충청지역의 각 대학에서 출발해 민간 기업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청소년 및 청년기관 및 시설 등이 참여하는 형식 교육 및 비형식, 무형식 교육을 활성화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단기간에 이를 실현하기 어려움. 동시에 조례 제정이나 충청권 메가시티의 협력 사무에 포함시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함
- 충청권 청년수도는 청년기본법에 청년친화도시가 법률 개정을 통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충청권을 중심으로]
주요내용 요약, 재정리함 (장근영 외)



(복환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비대면³⁾ 건강관리 효율화 방안- 건강 키오스크 활용 제안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 2023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전국 258개 보건소 중 141개 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5만 2천여 명의 어르신 참여자는 자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이용자(어르신)가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미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기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양을 보유한 스마트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함. 기기 제약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르신에게는 AI 스피커를 보급하여 운영하고있으나, 개인부담금 없이 장비를 구매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사업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와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를 확인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프라)를 활용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방안을 제안, 지역사회 내 포괄적 지원체계(보건-의료-복지)의 유기적인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 어르신 사업 참여 현황과 문제점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 수요 증가
 - 사업참여기관 : 54개소('20년~'21년) → 86개 소('22년) → 141개 소('23년.3월 기준)
 - 사업대상자 : 21,823명('20년~'21년) → 40,581명('22년) → 52,004명('23년.3월 기준)
 - 보건소의 건강측정기기(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등) 구매 비용의 한계로 사업의 한 차수에 일정 수의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다음 차수로 대기해야 하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3) 본 연구는 2023년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체연구과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안 마련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 일부를 발췌하고 개선방안을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스마트폰 활용 여부에 따른 어르신 참여 제약**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이용자(어르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오늘건강 앱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미션 수행을 위해 이용자가 설치하여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안드로이드OS 기반의 일정 수준 이상의 사양을 보유한 스마트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폰 이용자, 저사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
- 이러한 제약으로 참여가 어려운 노인에게는 AI 스피커를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개인에게 추가적인 개인부담금 없이 정부예산으로 구매·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의 한계로 더 많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음

○ **디지털 기기 사용 미숙(디바이스 연동 등)으로 인한 퇴락 및 관리 문제 발생**

- 서비스 대상자 중 70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전체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 참여기간인 6개월 이전에 중도 퇴락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유로 '스마트폰 및 건강측정기기 사용의 어려움'을 보고함. 이는 의도치 않게 스마트폰과 건강측정기기 간 블루투스 연동이 해제되었을 때 재연동의 어려움이 가장 큰 사유임
- 이러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의 경우, 사업 전담인력의 방문 및 이용자의 내소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부 보급형 건강측정기기의 측정정보 정확도 부족으로 잘못된 측정정보가 전담인력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어 비대면 모니터링 관리 업무에 어려움을 발생시킴

○ **디지털 건강형평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 효율화 방안 모색이 필요**

- 국내·외 다양한 연구들에서 디지털의 가용성, 서비스의 질, 정보 보안 등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취약층(노인, 다문화, 정신장애인 등)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건강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건강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디지털 건강관리 도구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⁴⁾

4) Kaihlanen et al. (2022). Towards digital health equity – a qualitative study of the challenges experienced byvulnerable groups in using digital health services in the covid-19 era. BMC Health Serv Res 22, 188.
Lawrence, K. (2022). Digital Health Equity, Exon Publications, 121-130.
박나영, 장사랑, 송은솔, 박은자. (2022). 앱 기반 디지털 헬스의 형평성 제고 방향 고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업 운영 현황과 문제점

○ 설문조사 개요

-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제공인력 244명을 대상으로 약 3주간 (23.9.13.~9.30) 사업운영 현황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함. 설문조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HIS)의 어르신 사업 메뉴 내에 설문조사 기능을 개발하여 진행함

○ 설문조사 결과

1) 보건소 사업 제공인력의 개선 요구가 높은 업무는 무엇인가

- 어르신이 사업에 참여, 지속 유지하는데 가장 큰 제약사항으로 나타나는 스마트폰 활용, 디바이스 연동에 대한 문제는 사업 제공인력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지역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대도시 지역은 물품관리나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도농복합 지역은 담당자 배정 등의 어려움, 농촌 지역은 대상자 선정, 대상자 관리계획 수립, 건강정보 모니터링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표 1> 가장 개선이 필요한 업무 조사 결과

구분	전체		대도시		도농 복합		농촌	
	계(합)	계(가중치)	계(합)	계(가중치)	계(합)	계(가중치)	계(합)	계(가중치)
예산집행	38	74	4	6	22	44	12	24
물품관리	47	89	17	34	24	43	6	12
대상자 선정	64	149	23	61	23	47	18	41
담당자 배정	43	98	10	22	20	48	13	28
대상자 건강 스크리닝	40	64	13	20	11	18	16	26
대상자 관리계획 수립	51	99	15	30	15	26	21	43
건강관리 정보제공	36	66	13	21	12	23	11	22
건강관리 미션부여	25	45	5	9	15	27	5	9
건강측정정보 모니터링	47	86	19	33	11	16	17	37
건강관리 컨설팅	41	75	10	16	16	27	15	32
신체활동 실천 컨설팅	31	51	9	12	11	21	11	18
디바이스 활용안내	83	188	23	58	42	94	18	36
행정업무 지원	57	118	11	21	31	70	15	27

* 합은 1순위 + 2순위 + 3순위 답변의 합, 가중치는 1순위 x 3 + 2순위 x 2 + 3순위 x 1의 합으로 계산함.

2) 사업 운영 형태(사업대상자 수, 제공인력 수 등)는 적절한 수준인가

- 사업 운영에 대한 제공인력의 주관적 적절성 평가 결과, 전반적인 영역에서 3.33-3.77점 사이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사업 제공인력 수에 대한 적절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어, 적절한 사업대상자 관리 및 업무 분배의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를 확인함

<표 2> 사업 운영의 적절성 조사 결과

구분	전체		대도시		도·농 복합		농촌	
	평균(점)	SD	평균(점)	SD	평균(점)	SD	평균(점)	SD
사업대상자 수	3.66	.89	3.56	.96	3.69	.81	3.69	.93
사업 제공인력 수	3.33	1.06	3.28	1.05	3.35	1.03	3.37	1.13
구성원 간 역할 분담	3.52	1.00	3.36	1.02	3.60	.95	3.56	1.04
제공되는 서비스 양	3.65	.90	3.59	.97	3.62	.88	3.74	.87
전문적 건강관리서비스	3.65	.90	3.56	.99	3.62	.89	3.76	.81
서비스 실적관리	3.63	.93	3.59	.99	3.61	.89	3.71	.95
사업에 대한 홍보	3.77	.84	3.57	.94	3.80	.74	3.90	.87

□ 사업 운영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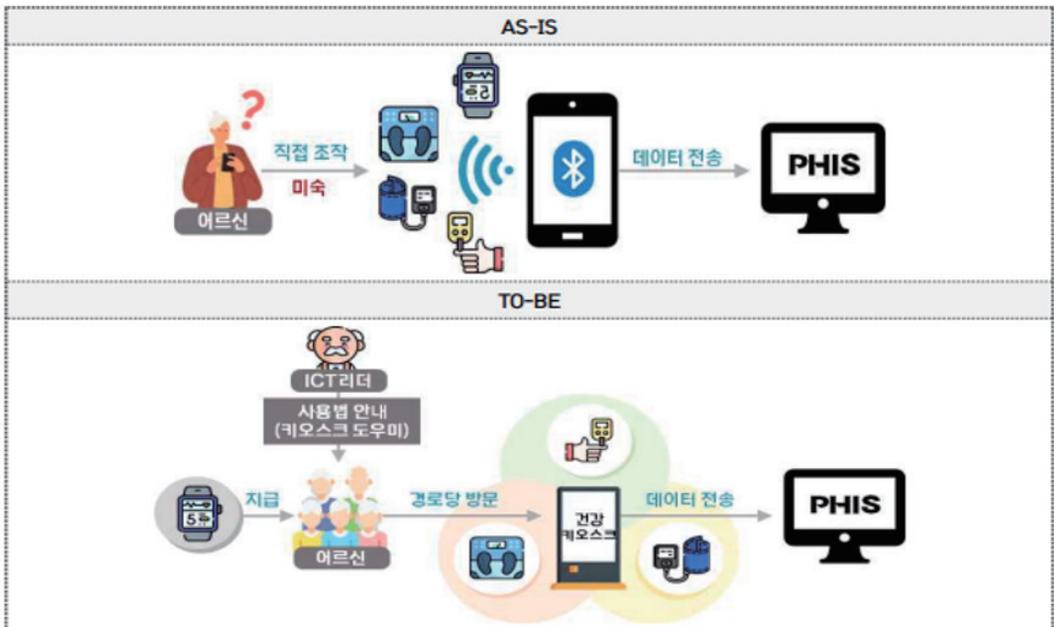
○ 국내 키오스크 도입 및 활용 현황

- 국내 키오스크 도입은 해마다 늘어 2015년 이후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 연평균 61.5% 성장하였으며⁵⁾, 매장형 키오스크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 발전하고 있음
- 어르신들의 디지털역량 및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관리 키오스크'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의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지자체별 경로당을 거점으로 지역 거주 노인의 건강 및 여가 보장을 위한 키오스크, 비대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현재까지 11개 자치구 105개소에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고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함
-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통해 어르신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키오스크' 설치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AI·IoT 사업에서 효율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됨

5) NH 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21). 국내 키오스크 도입 추이.

○ 건강관리 영역에서 키오스크 도입 장점 및 활용 방안

- (수혜자 확대) 스마트폰의 주요 역할인 건강측정정보를 중앙시스템으로 송신하는 기능을 탑재한 건강 키오스크를 개발하여 보건진료소, 경로당 등 지역사회에 설치하여 스마트폰 미보유자 참여 및 고령자도 쉽고 간편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서비스 완료자' 사후관리 모니터링 제공 등
 - (서비스 확대) 건강측정정보*의 항목 추가 및 정확도 향상으로 이용자별 맞춤형 건강 컨설팅 제공 기대 (* 건강측정 정보 : 신장(추가), 체중, BMI, 맥박, 산소포화율, 체온(추가), 내장지방 등)
 - (비용 절감) 건강측정기기 구매*비용 절감 및 기기 성능 향상으로 서비스 이용자 확대 · 질 향상
- * AS-IS : (대상자별)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AI 생활스피커 등
- * TO-BE : (대상자별) 활동량계 (공용) 건강 키오스크
- (업무 효율화) 스마트폰↔건강측정기기 연동 오작동에 따른 민원 최소화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사업 제공인력의 건강측정 모니터링 및 건강컨설팅 업무 효율성 제고
 - (서비스 접근성) 소규모 지역의 중심 거점 기관 1곳에 설치하면 방문노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만약 건강측정기기 보유가 부족한 지자체에서도 이용자 근처에 건강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다면 참여가능



[그림 1] 건강 키오스크 도입 예시

□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 건강돌봄의 공백없는 지속가능한 어르신 건강 모니터링 제공

- A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최근 제도적으로 '서비스 완료자' 도입으로 6개월간 서비스를 받고 완료한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음
- **보건진료소, 경로당 등 노인의 접근성이 높은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은 보건소 사업 이후 완료자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됨
- 선행연구에서 수행했던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경로당, 마을건강센터, 복지관 등의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보건소와 직·간접적으로 협력 또는 연계해서 건강 교육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점 기관에 설치된 **'건강관리 키오스크'**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시스템(PHIS)과 연동된다면, 노인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어르신 건강모니터링 체계 구축 가능**
- 기존 보건의료전문가인 사업 제공 인력들이 담당했던 '디바이스 활용 안내' 등의 업무에 과도한 행정력이 투입되었다면, 키오스크가 설치된 거점 기관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사업, 지자체의 약자 일자리 창출사업 등과 연계해서 동년배의 키오스크, 스마트폰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ICT 리더, 건강 리더, 동료지원가 등을 배치한다면 기존 과도했던 업무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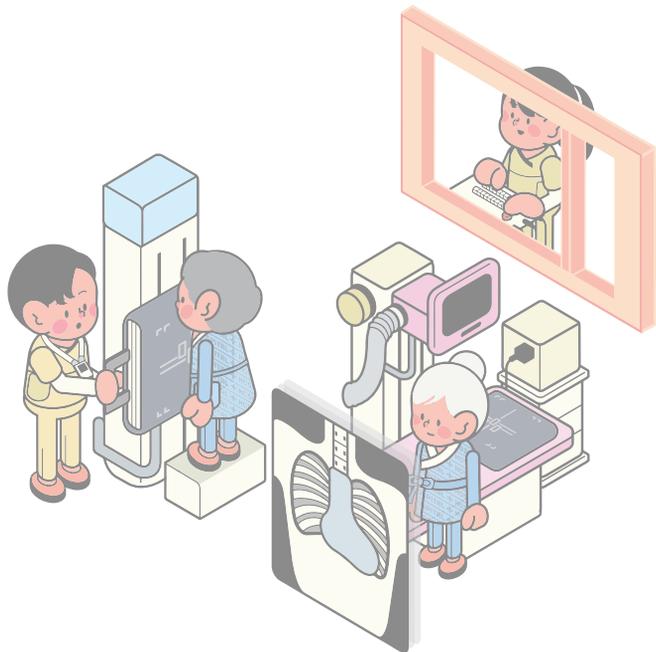
○ 지역인프라 기반 건강 키오스크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검토

-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 인프라 기반으로 신규 기기(건강 키오스크)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아직까지 지역의 인프라를 중심으로 공공형 디지털 건강관리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 제도 기반 마련도 필수적임
- 지역보건법 제5조(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산화) 제1항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정보 관리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 인프라를 중심으로 공공형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 또한, AIoT 기반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및 기술력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국내 민간 기업과의 협업도 수반될 필요가 있음**
- 최근 스마트 경로당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에서 모바일 건강관리,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공공의 A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도**

민간 기업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주도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노인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기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건강 키오스크' 도입을 제안. 향후 연구에서는 건강 키오스크 활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물적·인적자원 활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역인프라 기반 노인 건강모니터링 및 지역보건의료시스템(PHIS) 정보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모델 제시가 필요

※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 Issue PaperS」 1월호 주요내용 요약, 재정리함
(사회보장정보연구소 연구센터 | 우예신 부연구위원 / 건강보건본부 건강보건사업부 | 명노훈 과장)



Ⅲ. 정책분야

정책 동향

(농수해위) 신 농식품 마케팅 전략 : 라이브커머스

□ 라이브커머스 시장과 이용자 특성

- 실시간으로 제품 구매와 진행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라이브커머스가 빠르게 부상
 - ※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소비자들이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며 상품을 주문하는 전자상거래 방식을 의미함
 - 라이브커머스 거래액은 시장 형성 초기인 2020년 4,000억 원 규모에서 2023년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3년간 무려 25배가 증가함
- 라이브커머스 이용 경험률이 가장 큰 세대는 30대(66.2%)와 40대(61.2%)로 나타남
 -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주로 구매하는 상품 유형은 식품이 54.8%로 가장 많았고, 생활용품(44.0%), 의류 및 패션용품(39.5%), 농수산물 (23.2%) 순으로 나타남

〈그림〉 라이브커머스 이용 연령대 및 상품 현황



- 라이브커머스 이용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쇼핑 플랫폼은 '네이버 쇼핑라이브' 84.1%, '카카오 쇼핑라이브' 54.6%, '쿠팡 라이브' 47.6%, '티몬 TVON' 31.7% 순으로 나타남(중복응답 가능)

□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농식품 판매와 기회

- 라이브커머스는 농식품 마케팅 채널로서 매출 증대, 고객과의 양방향 소통
 - 국내의 지난 1년(2022년 9월~2023년 9월) 농식품 부문 라이브커머스 총매출액은 1,606억 원으로 파악
- 라이브커머스 소비자는 생산자인 농업인이 직접 쇼호스트로서 운영하는 방식을 선호
 -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농산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격대는 3만~5만 원 수준이며, 품질은 상등급의 품질로 파악됨
 - 소비자들은 생산자인 농업인이 쇼호스트로서 직접 방송하는 것을 선호함. 농산물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크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신뢰 증가

□ 전망과 시사점

- 라이브커머스는 유통 트렌드에 부응한 새로운 농식품 판매 마케팅 수단으로써 정착 전망
 -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지속적인 확장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농식품 생산자들이 생산 현장에서 직접 라이브커머스 방송 전면에 나서 방송을 진행하여 판매를 성공
 - 라이브커머스의 상품 노출 대비 판매량인 구매 전환율은 5~10% 수준으로 일반적인 전자상거래(0.3~1%)에 비해 높아 효과적인 새로운 농식품 판매채널로서 역할이 기대
-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농식품 판매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마케팅 기법 활용 및 콘텐츠 발굴 필요
 - 라이브커머스로 판매될 상품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디지털마케팅 역량 강화 필요
 - 농산물은 전문 쇼호스트보다 생산자가 전면에 나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구매자의 댓글 및 의견에 반응하는 등 실시간 소통을 통해 라이브 현장에서 시청자들과 공감대를 형성
-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국내외적 농식품 판매 신장이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 필요
 - 농가 단위의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기획·판매 장려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확보 필요
 - 농가 단위의 라이브커머스 판매를 위해서는 상품 및 방송 기획, 상품 홍보 영상 제작, 방송 장비 준비 등이 필요하며, 이에 더해 쇼호스트의 방송 진행 숙련도 등 판매자의 디지털마케팅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가를 대상으로 한 라이브커머스 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공공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농가가 보다 라이브커머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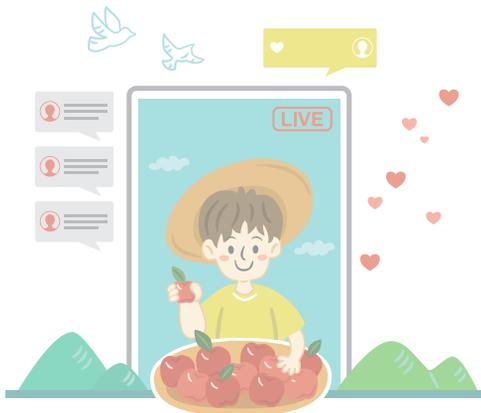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플러스 제8호, 2023. 11. 15.

○ **(현황) 충남도내 라이브커머스 판매 및 교육은 농업기술원 및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음**

- 농업기술원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강소농대전'을 추진 및 '충남 농업인 정보화대회' 개최하여 우수 농산물을 실시간으로 판매함
- 농업기술원 : 라이브커머스 교육과 관련하여 여성농업인 심화교육 추진(2023년 11월)
- 농촌활력과 : 라이브커머스 교육과 관련하여 판매자실전과정 운영 추진(2022년 2월)

○ **(검토의견) 온라인 시장의 중요성 및 구매자 트렌드를 반영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실정임**

- 현재, 도 농업기술원과 농촌활력과에서 라이브커머스 교육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바 **마케팅 기법과 함께 일원화 추진 필요함**



(건소위)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문제점

○ 오피스텔 현황과 거주가구 특성

-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 기능이 복합된 건축물로 「주택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고령화 및 1~2인 가구의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 시설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
- 오피스텔은 1980년대 중반 시장에 등장하였으며 1990년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등으로 개발이 본격화, 2010년 「주택법」개정을 통해 준주택으로 분류됨
- 오피스텔은 2022년 이후 100만 호가 넘게 공급되었고, 전체 재고 중 79~80%가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연립주택의 총물량(44.7만 호) 보다 많은 수준으로 주거용 건물로서 오피스텔이 가진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임
- 오피스텔 거주가구는 다른 주택유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고, 젊은 연령대의 1인 가구 중심이며, 대부분 임차형태로 거주하고 있으며, 타 주택 대비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음

주택유형별 가구특성, 주거특성, 주거만족도

구분	주택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가구원 수(명)	19	23	27	1.3	
가구주 연령(세)	55.1	51.2	52.6	36.7	
월평균 소득(만 원)	255.9	326.8	412.4	285.7	
점유형태 (%)	자가	46.3	55.0	69.3	14.4
	전세	14.1	21.6	14.9	28.3
	월세	33.8	20.1	13.4	54.7
전환임대료(만 원)	558.1	1,199.7	2,362.6	784.6	
주거 만족도	주택	2.86	2.88	3.12	3.14
	주거환경	2.82	2.88	3.07	3.15

출처: 국토정책 Brief No. 956

○오피스텔 관련 문제점

- (건축기준·관리)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되어 주택건설 등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건축수준 및 주거여건이 주택에 비해 열악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주택보다 관리가 미흡
- (금융)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와 특례보증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지원 시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취급되어 주택과는 다른 금융체계가 적용
- (세제) 오피스텔 관련 세금은 세목별로 법적인 용도 혹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비주택으로 구분되어 과세되며 세목별 또는 납세자 특성별로 같은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세금 부과수준에 차이가 존재
- (청약·전매제한) 청약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 주택과 관련된 각종 제한조치 적용 시 비주택으로 분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매제한의 영향도 받지 않음

□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

○오피스텔 관련 금융제도 현황

- (주택담보비율)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주택 주택담보비율은 담보금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오피스텔도 동일 기준 적용
- (총부채상환비율) 주택은 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이 적용되나 오피스텔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주택과 동일하게 40%가 적용되나, 주택과 주택 외 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산정 시 상환인정 기간이 달라 더 강한 수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었으며, 2023년 4월 24일 이후 주택 외 담보대출 중 오피스텔에 한하여 주택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

○오피스텔 관련 세제 현황

- (취득세) 주거용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비주택으로 취급되어 4%의 단일세율 적용, 2020년 8월 12일 이후 오피스텔 구매 시 주택수로 인정되어 주택 수에 따른 세금 종과 등의 영향을 받음
- (재산세)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사용 용도별 현황과세 원칙에 각기 다른 세금 부과체계를 적용,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 납부 시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됨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주거용으로 사용 시 주택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업무용으로 사용 시 별도합산토지의 부과기준을 적용받는데,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주거용으로 납부 시 과세부담이 더 큼
- (양도소득세) 주택은 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이 적용되나 오피스텔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임대사업자) 보유한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하는 오피스텔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일반임대사업 혹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혜택이 적용되고, 일반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금에 대한 혜택은 없으나 10%의 건물분 부가가치세환급이 가능

□ 오피스텔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이슈

○세금 부과 시 세목간 주택·비주택 취급 혼재에 따른 과세 일관성

-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간 그리고 동일한 오피스텔의 주거용·업무용 등록형태별 과세형평성 문제 존재
- 과세 부과를 위한 행정집행 측면에서 실질적 사용 용도 조사의 어려움과 주택 판정 회피 행태

○금융·청약 제도의 주택·비주택 체계 적용에 따른 일관성

- 금융 이용 측면에서 비주택 관련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주택과 차이 발생
- 주택과 오피스텔 간 청약제도 규제수준 차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법적 불확실성

- 주택 대비 낮은 수준의 건축기준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거환경과 안정성 열약
- 주택 대비 열악한 입주자 보호 및 관리 수준

□ 오피스텔 정책 개선방안

○오피스텔 제도 개선방향

- (오피스텔의 법적 위상 명확화를 통한 혼재체계 개선) 혼합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주택·비주택이 혼재되어 적용, 오피스텔의 현 실태와 사용 용도를 반영하여 법적 위상을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오피스텔과 주택 간 형평성 문제 최소화) 실질적인 주택으로 활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 간 제도 적용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신규 제도 적용에 따른 기존 오피스텔과 신규 오피스텔 간 간극 최소화) 법적 위상의 명확화와 형평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안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오피스텔과 신규 오피스텔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오피스텔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오피스텔 사용 용도 신고 의무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사용 용도 및 용도 변경 신고 의무화하여 실제 사용 용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 도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 필요
- 신고 의무화와 연계한 오피스텔 사용현황 관리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한 합리적 세금 부과, 임대차 분쟁 조정시 증거자료 활용

- 실제 사용 용도 및 기간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적용

- 현 비주택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취득세에 대해 사용 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 취득세체계를 적용
- 오피스텔은 최초 취득 시 사용 용도가 결정되지 않음에 따라 기존 체계의 취득세를 납부하되 사용 용도 신고제도와 연계하여 용도 확정 시 환급신청을 통해 주택본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제도 개선
- 오피스텔은 특정 사용 용도로 활용 중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기간 내 용도비중을 고려하여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도 검토 필요

- 오피스텔 정책 모기지 지원상품 확대와 규제 지역 적용

-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매와 임차를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 이미 운영되는 만큼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오피스텔정책 모기지 지원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
- 규제지역은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하여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세제, 금융, 청약, 전매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행위에 대한 지정 효과가 발생

- 오피스텔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개선

- 「집합건물법」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대비 사적 자치의 원리가 강하게 작용되어 대내외적인 통제가 미비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사항에 대한 점유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함

- 건축기준 강화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

- 주택으로서 사용비중이 높은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주거편익 증진과 주거안정성 확대를 위한 건축기준 강화가 필요하며 우선적 개선과제로 최소주거면적기준을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
- 오피스텔은 업무용보다 주거용 활용 비중이 높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 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출처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No. 956 재작성



(교육위) 2023 교육여론조사(교육통계) 결과 및 시사점

□ 교육여론조사란?

○ 개요

- 1999년 제1차 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제18차(2023)까지 수행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우리나라 교육과 교육정책 전반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 의견을 묻는 대표적인 교육분야 여론조사임
-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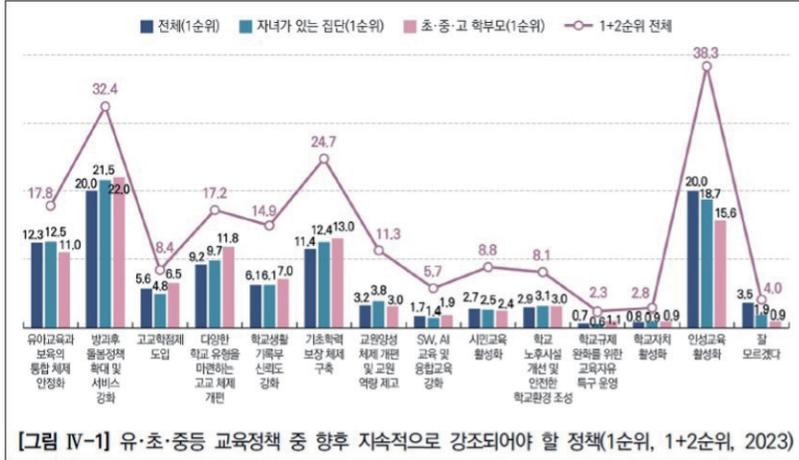
○ 목적

- 2022년 대통령 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으로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 등 조사를 통해 향후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영역별 주요 조사 결과 요약

○ 교육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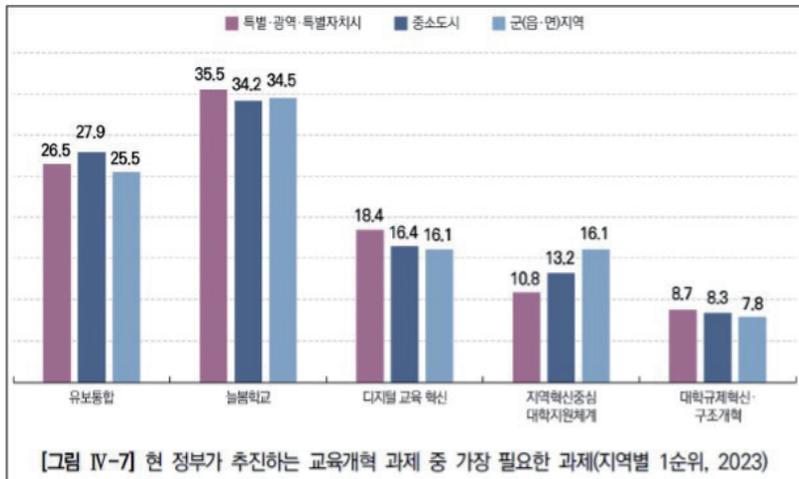
- 유·초·중등 교육정책 가운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정책**으로 방과후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20%), 인성교육 활성화^(20%),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체제 안정화^(12.3%)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제18차 조사 신규] 현재 추진 중인 유아·보육통합 관련 정책 중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으로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29.7%), 교육·보육서비스 인프라 강화^(24.6%), 교사의 전문성 향상^(21.1%)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제18차 조사 신규]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 **늘봄학교**(34.8%), **유·보통합**(27.1%), **디지털 교육혁신**(17.3%),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12.3%), **대학규제혁신·구조개혁**(8.5%)의 순서로 나타남



○학교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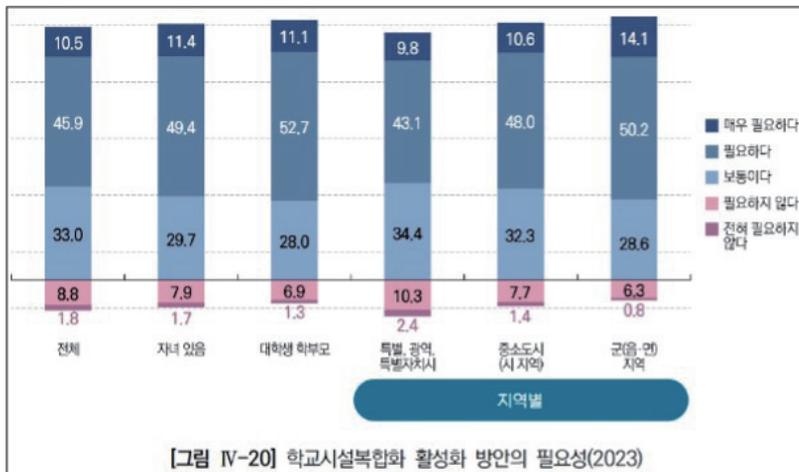
- 초·중·고등학교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보통(46.0%), 부정적(41.8%), 긍정적(12.2%) 순으로 응답함
- 초·중·고 학부모 대상으로 한 초·중·고등학교 전반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44.7%), 보통(40.3%), 긍정적(14.9%) 순으로 나타남
-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우선 과제로
 - 초·중·고 전반적으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22.8%), 학업성취도 제고(15.7%),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15.2%)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 활동(23.1%)

- **중학교의 경우**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 활동^(22.5%)
-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교육(진학 및 취업지도 포함) 강화^(27.1%)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제18차 조사 신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규모 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 초·중·고등학교 간 '통합운영학교' 지정·육성^(32.5%), 지역의 사회(인·산업)적 특성에 적합한 학교규모 육성 정책 수립^(32.1%), 소규모학교 유지·존속을 위한 지원^(20.1%), 인근 소규모학교 간 통·폐합^(15.3%) 순서로 나타남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규모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묻는 문항에 대해 '초·중·고등학교 간 통합운영학교 지정·육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학부모 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를 차지함**
 - 중소도시나 군(읍·면) 지역의 응답자의 경우 '지역의 사회(인구, 산업)적 특성에 적합한 학교규모 육성 정책의 수립'을 1순위로 꼽았지만 이들도 '통합운영학교 지정·육성'을 근소한 차이의 2순위로 꼽음
 - 특별·광역시·특별자치시의 응답자들의 2순위 응답도 '지역의 사회(인구, 산업)적 특성에 적합한 학교 규모 육성 정책의 수립'이었음
- ➔ 이러한 응답결과는 **학부모 여부, 지역적 차이를 떠나 응답자의 다수가 통합운영학교의 지정과 육성, 지역에 적합한 학교규모 육성**이라는 방향에 대해 **동감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제18차 조사 신규] 학교시설복합화 활성화와 관련하여 '긍정적^(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6.4%로 나타났음
 - 학교시설복합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특히, 지역적으로는 특별·광역·자치·중소도시보다 군(읍·면) 지역의 요구가 높았던바,
 -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 지역에서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 교육 활동 및 학교시설에 대한 활용 요구가 높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 학교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학생 수가 매우 적은 과소 규모의 학교를 학교급 단위로 유지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함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중·고등학교 간 통합운영학교와 학교 시설을 학생뿐만이 아닌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에 문화, 체육, 복지, 돌봄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학교시설복합화’는 인구감소지역 내에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 인구감소지역 내 특히 면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폐교하는 대신 초·중 통합 운영학교를 설치하고 학교시설을 복합화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



○교사

-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남(평균 3.14^{전년 대비 0.09 증가})
- 초등교사의 평균은 3.19^(전년 대비 0.02 증가), 중학교 교사의 평균은 3.05^(전년 대비 0.08 증가), 고등학교 교사의 평균은 2.98^(전년 대비 0.10 증가)로 나타나
- 최근 3년 초·중·고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부모 등)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2.5%가 ‘심각함(매우 심각+심각)’으로 응답하였고
- 5점 척도로 환산 시 3.78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21년 3.39 → 22년 3.61 → 23년 3.78)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심각한 이유로는

-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9.6%),
- 학교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부모 등)의 불신(22.7%),
-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 부족(17.2%)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원자격증 없는 현장전문가의 교사를 초빙하는** 정책에 대하여 찬성 50.9%, 반대 28.7%, 잘 모르겠다 20.4%로 나타났고,

-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도 찬성 54.8%, 반대 28%, 잘 모르겠다 17.2%로 나타나,

➔ 학교에서 교사 자격증이 없는 현장전문가의 교사 초빙과 관련하여 국민의 약 50%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비율은 **최근 3년간 근소하게 유지되고 있음**

○학생

- 초·중·고등학교 전반적인 학생의 인성 수준에 대해 '부정적^(낮다+매우 낮다)'이라는 응답이 45.9%,

- 초등학생의 경우 '부정적^(낮다+매우 낮다)'이라는 응답이 42.8%,
- 중학생의 경우 '부정적^(낮다+매우 낮다)'이라는 응답이 54.3%,
- 고등학생 '부정적^(낮다+매우 낮다)'이라는 응답이 52.5%로 나타남.
- 학생의 좋은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61.8%), 친구^(14.4%), 학교^(13.5%)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심각성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9.9%가 '심각함^(매우 심각하다+심각하다)'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 초등학교의 경우 '심각함^(매우 심각하다+심각하다)' 45.9%,
- 중학교 '심각함^(매우 심각하다+심각하다)'이라는 응답이 65.5%,
- 고등학생 '심각함^(매우 심각하다+심각하다)'이라는 응답이 64.2%로 높게 나타남
-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가정교육의 부재^(37.4%),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24.0%), 폭력적 대중 매체의 접촉^(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교폭력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 **처벌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으로 전체 응답자의 경우 사회성·인간관계^(25.2%), 도덕성^(15.6%), 창의력^(12.2%)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생활습관^(27.3%), 도덕성^(16.9%), 창의력^(14.8%) 등의 순
 - 중학교에서는 사회성·인간관계^(20.7%), 도덕성^(19.6%), 사고력^(12.6%) 순
 -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성·인간관계^(19.9%), 시민의식^(14.1%), 도덕성^(11.2%) 순
- ➔ 전반적으로 학교교육에서 '사회성·인간관계' 및 '도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미래사회 대응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34.3%), 협력적 의사소통^(16.2%), 창의적 사고 역량^(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제18차 조사 신규]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방법으로 협력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방법^(42.8%), 학생 참여형·주도형 교육방법^(24.8%),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방법^(16.9%) 등의 순서로 나타남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

- 정부의 교육재정이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교육단계로 초등학교^(26.1%), 고등학교^(18.9%), 유아교육^(18.5%), 중학교^(11.2%), 일반대학^(10.1%)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제18차 조사 신규] 현 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과제로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23.0%), 유치원과 돌봄 기능 강화^(16.5%),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강화^(14.1%) 순서로 나타남
- 우리나라 교육 분야 양극화 현상에 대하여 68.8%는 심각함이라고 응답하였고,
 - 교육 분야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지역의 교육여건과 환경 차이를 개선^(32.4%), 가정환경의 차이^(27.7%), 학벌주의에 대한 사회·문화적 분위기 개선^(24.0%), 학교 간의 교육력 차이^(15.9%) 응답 순서로 나타남

○교육현안

- [제18차 조사 신규]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부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5.2%는 부담이 큼^(지출 부담이 크다+지출 부담이 매우 크다)으로 응답하였으며,
 - 5점 척도 환산 평균에서는 초등학교 3.84, 중학교 3.98, 고등학교 4.08로 나타나 고등학교에서 사교육 지출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론조사 분석에 따른 2024년도 교육정책 집행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영역	시사점 요약
교육정책	<p>현 시점에서 방과후 돌봄정책,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학습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음</p> <p>국민들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로 고등교육 분야보다 유·초등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음</p>
학교교육	<p>학교급별로 차별적인 교육정책의 설계</p> <p>모든 학교급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 강조</p> <p>인구 감소 지역 학교의 새롭고 추가적인 기능 모색</p>
교원	<p>교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고 있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심각성도 높아지고 있음</p> <p>교사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교육 여건 조성 필요</p>
학생	<p>학생의 인성과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과 이를 위한 '가정요인'의 중요성</p> <p>학생의 학업성취에 있어서 학생의 노력과 열의는 물론 학교 및 학급의 학습 분위기, 가정의 학습 환경의 영향력 확인</p> <p>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가정교육 및 가해학생 처벌에 대한 요구</p>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p>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 확인 및 학교의 역할 강조</p> <p>디지털 기반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체계적 계획 마련 필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등</p>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	<p>(교육재정투자) '초등교육'단계에 대한 재정투자 요구가 가장 높았고, 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교육재정 확대 요구</p> <p>(교육 분야 양극화) 교육 분야 양극화의 심각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필요</p>
교육현안	<p>사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 수준 높음</p> <p>학교교육 체제에 대한 탄력성과 유연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p>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2023.12) 재작성

IV. 세입장수 실적

국세

2024년 1월 국세수입 현황

(2024. 2월말 기준)

○ (국세수입) '24년 1월 국세수입은 45.9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0조원 증가

– 소득세는 취업자수 증가*, 금리 상승** 등에 따라 +0.6조원 증가

* 상용근로자수(만명): ('22.12) 1,587 → ('23.12) 1,626 (+2.5%)

**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21.12) 1.79% → ('22.12) 4.63% (+158.7%)

–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 환급액 증가 등으로 △0.2조원 감소

–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에 따라 +2.3조원 증가

'23. 4분기 민간소비(전년동기비): +1.0%

–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에 따라 +0.1조원 증가

* 증권거래대금(코스닥+코스피): ('22.12) 247.1조 → ('23.12) 358.4조 (+45.0%)

(단위 : 조원, %)

세목	구분	'23년 실적	'24년 예산	1월 당월				1월까지 누계				1월 진도율		
				'23년	'24년	증감	(증감율)	'23년	'24년	증감	(증감율)	'23년	최근5년	'24년
· 총 국세		344.1	367.3	42.9	45.9	3.0	(7.1)	42.9	45.9	3.0	(7.1)	12.5	12.5	12.5
· 일반회계		333.9	356.1	41.9	44.9	3.0	(7.1)	41.9	44.9	3.0	(7.1)	12.5	12.6	12.6
○ 내 국세		306.1	321.6	39.9	42.9	3.0	(7.5)	39.9	42.9	3.0	(7.5)	13.0	13.0	13.3
– 소득세		115.8	125.8	12.4	13.0	0.6	(4.7)	12.4	13.0	0.6	(4.7)	10.7	10.4	10.3
– 법인세		80.4	77.7	2.1	2.0	△0.2	(△7.9)	2.1	2.0	△0.2	(△7.9)	2.7	2.7	2.5
– 상속증여세		14.6	14.7	0.6	0.8	0.2	(29.1)	0.6	0.8	0.2	(29.1)	4.3	5.5	5.6
– 부가가치세		73.8	81.4	20.7	23.1	2.3	(11.2)	20.7	23.1	2.3	(11.2)	28.1	27.1	28.3

- 개별소비세	8.8	10.2	1.1	1.1	0.0	(0.7)	1.1	1.1	0.0	(0.7)	11.9	11.5	10.4
- 증권거래세	6.1	5.4	0.4	0.4	0.1	(24.6)	0.4	0.4	0.1	(24.6)	5.9	8.1	8.3
- 인 지 세	0.8	0.9	0.1	0.1	0.0	(6.7)	0.1	0.1	0.0	(6.7)	8.0	9.2	8.0
- 과년도수입	5.7	5.7	2.5	2.5	△0.0	(△0.8)	2.5	2.5	△0.0	(△0.8)	44.1	41.4	43.7
○ 교통에너지환경세	10.8	15.3	1.0	0.9	△0.0	(△2.5)	1.0	0.9	△0.0	(△2.5)	8.8	8.8	6.1
○ 관 세	7.3	8.9	0.6	0.6	0.0	(8.3)	0.6	0.6	0.0	(8.3)	7.9	9.0	7.0
○ 교 육 세	5.2	6.2	0.4	0.4	△0.0	(△0.8)	0.4	0.4	△0.0	(△0.8)	7.7	8.7	6.4
○ 종합부동산세	4.6	4.1	0.1	0.0	△0.0	(△51.5)	0.1	0.0	△0.0	(△51.5)	1.9	1.5	1.0
• 특 별 회 계	10.1	11.2	1.0	1.1	0.1	(6.4)	1.0	1.1	0.1	(6.4)	10.0	9.6	9.6
○ 주 세	3.6	3.6	0.8	0.8	△0.0	(△0.6)	0.8	0.8	△0.0	(△0.6)	21.5	20.8	21.4
○ 농 특 세	6.6	7.6	0.2	0.3	0.1	(28.9)	0.2	0.3	0.1	(28.9)	3.6	4.3	4.0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 2. 29.) '24. 1월 국세수입 현황



IV. 세입징수 실적

도세

충남도내 지방세 징수현황

(‘24. 2월말 기준)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 2. 29.) '24. 1월 국세수입 현황

□ 도내 총 지방세 세입현황

- (도내 총 지방세) ‘24년 2월말 기준 도세 및 시군세 총 징수액 1조 508억원
 - 예산액 대비 21.7% 징수율, 2월 목표액 대비 105.7% 징수율
 - 전년동기(1조 838억원) 대비 329억원 감소(△3.0%)

(2024. 2월말 현재,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2월까지 목표액 (B)	누계 징수액 (C)	징수율		전년동기 징수액 (D)	전년대비	
				예산액 대비 (C/A)	당월 목표 대비 (C/B)		증감액 (C-D=E)	증감율 (E/D)
합 계	4,847,797	994,426	1,050,893	21.7%	105.7%	1,083,874	△32,981	△3.0%
도 세	2,908,600	698,967	719,046	24.72%	102.87%	693,539	25,507	3.7%
시군세	1,939,197	295,459	331,847	17.1%	112.3%	390,335	△58,488	△15.0%

□ 도 지방세 세입현황

- (도 지방세) ‘24년 2월말 기준 지방세 7,190억원 징수
 - 연목표액 대비 24.72% 징수율, 2월 목표액 대비 102.8% 징수율
 - 전년동기액(6,935억원) 대비 255억원 증가함(+3.7%)
- (취득세) ‘24년 2월말 기준 취득세 1,949억원 징수
 - 2월 세입 중 취득세 징수액은 도세의 27% 차지함
 - 2월 목표액 대비 180억원 증가, 전년동기액 대비 245억원 증가함

('24. 2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2월까지 목표액 (B)	누계 징수액 (C)	징수율		전년동기 징수액 (D)	전년대비		
				예산액 대비 (C/A)	당월 목표 대비 (C/B)		증감액 (C-D=E)	증감율 (E/D)	
도세	소 계	2,908,600	698,967	719,046	24.72%	102.87%	693,539	25,507	3.7%
	취 득 세	1,023,400	176,905	194,979	19.1%	110.2%	170,389	24,590	14.4%
	등록면허세	77,300	176,905	16,970	22.0%	100.3%	14,566	2,404	16.5%
	레 저 세	22,800	3,208	4,154	18.2%	129.5%	3,233	921	28.5%
	지방소비세	1,361,500	439,109	439,109	32.25%	100.00%	447,107	△7,998	△1.8%
	지역자원 시설세	131,900	9,329	8,979	6.8%	96.2%	5,823	3,156	54.2%
	지방교육세	286,400	52,540	50,619	17.7%	96.3%	49,124	1,495	3.0%
	지난년도 수입	5,300	954	4,236	79.9%	444.0%	3,297	939	28.5%



IV. 세입징수 실적

시군세

충남 시군별 시군세 징수현황

(‘24. 2월말 기준)

- (목표액 대비) 도내 시군별 시군세 2월 총 목표액 2,954억원 대비 112.3% 증가
 - 2024년 2월 징수 목표 대비 징수율이 높은 시군은 보령시(161%), 예산군(138%), 태안군(131%) 등으로 나타남
 - 반대로, 2월 징수 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률이 낮은 시군은 논산시(74%), 홍성군(79%), 계룡시(82%) 등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전년동기 대비 시군세 징수액은 △584억원(△15.0%) 감소
 - 2024년 2월 징수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시군은 보령시(17.9%), 부여군(20.4%) 등으로 나타남
 - 반대로, 징수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시군은 청양군(△36.8%), 서천군(△35.9%), 계룡시(△32.8%) 등으로 나타남

(2024. 2 말 현재,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A)	2월까지 목표액 (B)	징수액 (C)	징수율		전년동기 징수액 (D)	전년대비	
				예산액 대비 (C/A)	당월 목표 대비 (C/B)		증감액 (C-D=E)	증감율 (E/D)
합 계	1,939,197	295,460	331,846	17.1	112.32%	390,334	△58,488	△15.0%
천안시	572,000	79,724	90,857	15.9	113.96	103,405	△12,548	△12.1%
공주시	87,500	13,443	14,075	16.1	104.70	17,663	△3,588	△20.3%
보령시	70,120	7,727	12,454	17.8	161.18	10,559	1,895	17.9%
아산시	397,100	59,200	76,286	19.2	128.86	88,165	△11,879	△13.5%

서산시	180,400	29,590	29,125	16.1	98.43	31,115	△1,990	△6.4%
논산시	80,254	18,175	13,582	16.9	74.73	15,945	△2,363	△14.8%
계룡시	30,918	7,495	6,201	20.1	82.74	9,234	△3,033	△32.8%
당진시	163,239	28,082	31,224	19.1	111.19	40,018	△8,794	△22.0%
금산군	48,113	6,724	7,340	15.3	109.16	9,743	△2,403	△24.7%
부여군	41,600	5,885	7,646	18.4	129.92	6,352	1,294	20.4%
서천군	40,410	5,861	6,665	16.5	113.72	10,400	△3,735	△35.9%
청양군	29,819	3,576	4,623	15.5	129.28	7,319	△2,696	△36.8%
홍성군	74,370	15,940	12,725	17.1	79.83	16,866	△4,141	△24.6%
예산군	66,750	8,054	11,155	16.7	138.50	15,040	△3,885	△25.8%
태안군	56,604	5,984	7,888	13.9	131.82	8,510	△622	△7.3%



▶ 본 정보지에 게재된 글과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와 아이디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문의 개별 사안은 구체적인 여러 사정에 의하여 각기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충청남도의회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본 정보지에 수록된 이번달 주제, 충청남도 및 교육청 주요 정책이슈, 세입징수 실적 등은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검토한 내용입니다.

· 또한, 정책동향은 정책 연구기관의 최신 자료를 수집·가공한 자료입니다. 정보지를 인용하시기 전에 원 출처를 확인하신 후 원문을 바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